

“재정운용, 정치 따라가는 것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하위 80% 재난지원금 적정 판단” 전국민 지급 반대입장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수인 이재명 전 국민재난지원금 움직임과 관련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여당 압박에도 “재정운용은 정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이냐는 정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80%, 100%에 대해 국민도 피로



감을 느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소득 하위 80%를 제시했으면 국회 국민도 납득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놓으라 국회에서도 대립하는 거라고 본다”고 질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가입자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2019년도로 돼 있는 부분은 2020년도(소득이 줄어든 내용)를 신고하면(지원대상)에 가산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반영된 최근 소득은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원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대표가 논의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에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김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 보상을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9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네 차례 추경에 지원해왔다”며 “올해도 1차 추경에서 풀러스자금을 드렸고 2차 추경에서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도 부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경전도 발언했다. 우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으니 전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느냐”며 “100분민에 깨지기도 했지만, 여야 대표가 모처럼 모여서 시원하게(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한 건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해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하위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원님과 견해가 다르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는 지적에 “선진국보다 재정 투입이 적은 것은 맞으나 재정 증가 속도를 본다면 결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다”며 “금융을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홍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추경에서(소득 하위) 80%를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얼마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3조원 쯤 안되는 거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은 제약이 있고 같은 돈이라면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70% 생각을 했는데(여당) 의견을 수렴해서 80%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방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맞벌이 가구(기준 완화 등) 정부가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판 뉴딜 계획 수립 1주년 문 대통령, 오늘 4차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발전·보완한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목적에 따라 기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대체했다. 지난해 7월 13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뒤인 9월 3일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로 발전했다.

당초 매월 1~2회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갖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난해 11월18일 3차 전략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 세부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이외는 별도로 ▲한국판 뉴딜 소개 ▲한국판 뉴딜 정착을 위한 정책 노력 ▲현장 우수 사례 소개 ▲한국판 뉴딜 2.0 산업계 부자 방향 보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현덕 전주시의회 의원 주관하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태권도진흥·관광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

전주시의회, 태권도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정책 토론회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현덕 전주시의회 의원 주관하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국기(國旗)인 태권도 지역 저변 확대 및 국내 유일 지역무형문화재(전라북도)인 겨루기 태권도 보존 필요성 확립, 그리고 태권도 종주도시로의 도약 측면에서 체육관 건립 추진 타당성 및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태권도 겨루기의 원형 전주의 가치를 기치로 전주 태권도 전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 태권도 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의 타당성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현덕 전주시의회 의원 주관하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호남동행, 익산 중앙시장 폭우 피해현장 방문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은 13일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익산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난 6~8일 전북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져 익산 중앙동의 상가 200여 곳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폭우피해로 고립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국민의힘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양금희 익산시 동행의원(대구 북구갑)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은 물론 실효성 없는 정부의 피해 복구 대책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고쳐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부족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새만금-전주-장수 구간 철도 구축하자”

박용근 도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새만금 대중국 진출기지 활용하는데 최고의 방법”

새만금과 전주, 장수를 잇는 철도, 가장 ‘새장선’ 철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구 광역간 철도(달빛내륙철도)에 새만금-전주-장수를 철도로 연결해 전북의 동과 서를 관통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장선 구축이야말로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새만금을 대중국 진출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전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2조 3,894억) 철도, 대구광주(4



조 850억) 철도 두가지 모두 반영되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록 전주-김천간 철도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따진다면, 전주-김천간 철도 추진에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완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근 의원은 “금년 국회 예결위원회에 보내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함된 만큼,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했던 동부권 발전을 위해 가장 ‘새장선’ 철도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설득은 물론 대선공약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전북도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의회 문건위,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위원들이 13일 삼진강댐과 동화댐, 그리고 남원과 장수 일원의 급경사지 수해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을 위한 현지 활동을 전개했다.

삼진강댐은 작년 8월 있었던 대규모 집중호우 당시 홍수기제한수위 미유와 긴급 대량방류 등으로 막대한 홍수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작년과 같은 인재가 두 번 다시 없도록 한시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댐운영규정과 매뉴얼 개정 등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류하천 관리에 있어 “국토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자원공사가 댐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이차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댐 관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